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 목적

-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24. 11. 4.(월) ~ 11. 17.(일) <14일간>
※ 제327회 정례회 : 2024.11.1.(금) ~ 12. 20.(금), <50일간>

3. 감사 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5곳)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1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디자인정책관○ 미래청년기획관○ 글로벌도시정책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무보조 직원
위 원 장	국민의힘	김길영	
부위원장	국민의힘	이상욱	· 수석전문위원 조 성 준 · 의사지원팀장 김 상 원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 전문위원 하 미 경 · 입법조사관 권 수 정
위 원	국민의힘	김원태	· 입법조사관 박 성 원 · 입법조사관 김 금 란
	국민의힘	민병주	· 입법조사관 이 주 병 · 주무관 공 현 주
	국민의힘	서상열	· 주무관 이 지 인 · 주무관 박 성 하
	국민의힘	윤종복	· 주무관 장 미 영 · 속기 및 녹취 : 3명
	국민의힘	허 훈	※ 정책지원관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김유진, 이주호, 김영광, 윤주이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5. 감사 일정별 대상기관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2024. 11. 4.(월)	도시공간본부(1일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2024. 11. 5.(화)	도시공간본부(2일차)	현 장
2024. 11. 6.(수)	휴 감	
2024. 11. 7.(목)	미래청년기획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2024. 11. 8.(금)	디자인정책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2024. 11.11.(월)	서울디자인재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2024. 11.12.(화)	글로벌도시정책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2024. 11.13.(수)	균형발전본부(1일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2024. 11.14.(목)	균형발전본부(2일차)	현 장
2024. 11.15.(금)	휴 감 ※ 운영위원회 행감	

6. 주요 감사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관명	주요 감사사항
도시공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 서울대개조 관련 정책 수립, 국가상징공간 조성 업무 추진현황 ○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수립·운영, 재창조 전략 추진 ○ 경부간선도로 일대 공간개선 구상,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현황 ○ 공항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추진현황 ○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관련 업무 추진현황 ○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신규·재지정 검토 등 총괄 ○ 신속통합기획 수립 및 운영,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및 관리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 수립·시행,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부동산 중개업 등 관리 현황
균형발전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도심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및 남산곤돌라 도입 추진 ○ 동북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 총괄·조정 ○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조정 ○ 서북권 서울창조타운(舊 혁신파크) 및 수색·DMC역 복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 ○ 서남권·동북권 신규 거점사업 추진 현황 ○ 국가상징공간조성 및 세종로공원 정비사업 등 광화문광장 일대 편의·상징성 강화 관련 사업 총괄·조정

<p>디 자 인 정 책 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정책 수립 / 디자인서울 2.0 기반조성 ○ 공공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진흥 ○ 디자인재단 지도·감독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관리·운영 ○ 디자인산업 정책기반 조성 / 디자인 협력 개발 및 확산 ○ 디자인전문기업 지원 / 중소기업의 디자인 활용지원 사업 추진 ○ 도시경관 정책 수립 및 시행 /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 및 야간경관 개선 ○ 좋은빛 환경조성 / 빛 활용 축제·미디어 사업 추진 / 옥외광고물 정책 총괄 기획 등
<p>미 래 청 년 기 획 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기본계획·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의체 운영지원 ○ 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자율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청년수당 사업 운영 및 관리 ○ 미래 청년 일자리, 직무체험 프로젝트, 해외 일경험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 시행 ○ 서울영테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등 금융 관련 사업 시행 ○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관리 ○ 청년 마음건강 사업,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시행 ○ 청년정책 홍보 및 소통 전략계획 수립·시행 등
<p>글 로 벌 도시정책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민정책 관련 정부부처협력 및 제도개선 ○ 외국인인력·유학생 유치 확대, 정착 유도 및 지원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시설의 설치·운영 ○ 다문화 인식개선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 각종 민간위탁 시설의 기관선정, 운영 및 관리 ○ 해외 지역별 민관 교류·협력 및 해외 초청연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친선도시·우호도시 선정 및 교류·협력 ○ 각종 국제회의 총괄·조정, 국제기구·회의 유치 및 지원·협력 ○ 서울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우수정책 해외진출 지원(ODA)
<p>(재)서울 디자인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디자인 행사, 전시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사항 ○ DDP 운영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DDP 콘텐츠 및 프로그램 기획 및 구축에 관한 사항 ○ 디자인인재발굴 및 비즈니스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브랜드 및 DDP 자체 브랜드 정체성 확립 및 상품개발과 확산에 관한 사항 ○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관리 운영 등

7.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1) 감사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 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자료요구
계	216	105	56	55
도시공간본부	42	23	13	6
균형발전본부	27	11	11	5
디자인정책관	24	14	3	7
미래청년기획단	46	23	12	11
글로벌도시정책관	32	17	9	6
서울디자인재단	45	17	8	20

(2) 주요 지적사항

가. 시정 요구 사항 105건

[도시공간본부] — 23건

1.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강남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경우 강남북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므로 강북과 구도심에 대한 대책을 병행해 수립하기 바람.
2.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전제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놓고 아파트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 일상권과 공간 대개조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조건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4.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관리기준 중 복원비오톱에 대한 이전·복원·관리 비용을 모두 토지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모든 부담을 토지주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거나 유지관리에 대한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음.
5.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가 늦어져 주민들의 정비수단 선택권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갈등 발생이 우려되므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6.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에 따른 인근 주민 재산권 제한 및 피해에 대한 보상·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서울시에서 ICAO에 제안한 김포공항 고도제한(안) 또는 의견에

대한 내용을 별도 보고 바람.

7. 용적이양제도 실시해 핵심은 '용적가치 산정방식'인데 용적 가치에 대한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합의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현재 진행중인 용역에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용적 가치 기준 산정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람. 또한 제도 적용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8. 신고도지구 지정 관련, '24년 6월 서울시 고도지구가 재정비되었으나 해당 지역 내 건축물 노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고도지구 높이 완화기준을 경관 보전뿐만 아니라 사업성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제2세종문화회관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내용이 크게 변경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대상지 선정 및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 변경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10.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대상지가 여의도 공원 내 '한국 전통의 숲'이므로, 임상이 양호한 식생 등에 대해서는 보전방안 마련이 요구됨.
11.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하여 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외부위원들이 있으므로 위원회 중복 위원들의 조정을 거치는 등 개선해야 할 것임.
12.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질의사항 중 미회신된 질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질의내용이 시민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조속히 답변을 받아야 할 것임.

13. 최근 3년간 각종 기념품 및 상품권의 구입단가가 상이함. 저렴한 구매가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배포·잔여개수 자료를 정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4.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정되고 있고 현재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보상체계 마련 또는 구역 해제 등 조치가 필요함.
15.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 사업비가 불용되었음. 대학 혁신성장시설 내 지역기여시설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6.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 총 사업비 25조 6천억, 개발 이익 31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국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서울시가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더 치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17. 공간혁신구역 관련, 용도지역 개편에 대한 서울시 가이드라인 정립과 투명한 지정 절차가 필요하며, 과도한 상권 확대로 공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모니터링 해야할 것. 또한 공간혁신구역 지정 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급부로 공공기여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임.
18.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학교시설 결정 후 미집행 용지 다수 및 일부 미활용 용지의 경우 세금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까지 납부하고 있음. 학교시설 변경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만큼 개발계획 수립 시 교육청 취학 관련 계획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체계 구축 필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위원 구성에도 교육전문가 포함하는 방안 고민해야.
19.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지 선정 관련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

야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 오세훈 시장이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고, 심지어 도시공간본부는 상업지역 물량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하니, 시장의 발표와 담당 부서의 정책이 엇박자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 바람.
21. 용적거래제도 관련, 용적가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토지 소유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개발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개발이익 환수, 난개발 해소 등 도시계획 운영상 규제와 손실에 대한 보상해결 기법으로 접근하면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명확한 기준 제시 바람.
22.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하여 자원확보, 이해관계 조정 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므로 자원조달 방법 제시할 것. 서울시 15개 자치구에 걸친 사업인 만큼 우선순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23.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초기 2~3년간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차츰 실효성이 감소함.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 조정으로 일부 구역의 지정 해제를 진행했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과거의 일괄적인 운영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정책 운영의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균형발전본부] — 11 건

1. 서울혁신파크 매각 관련하여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등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을 위한 기업

설명회부터 개최함.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 및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도 정리 등 절차를 준수하고 개발 논의를 시작할 것.

2.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2~2024년 불용률 20% 이상 사업이 41건으로 5건은 100% 불용임. 정무적 판단 및 시민설득 과정을 거쳐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불용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람.
3. 문정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미래형 업무단지를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공실이 생기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음.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살펴보고 현실에 맞게 반영해주시기 바람.
4. 매년 반복되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문제 등 고질적 체납자 관리가 미흡함. 예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5. 서울혁신파크의 SH 관리위탁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지 않음.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전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절차상 주민들 오해를 불러오는 것임. 정무적 판단 및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할 것.
6. 2023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 2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사후보고를 하지 않음. 사후보고는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다시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7. 도시재생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과밀부담금 징수 전망이 15일만에 300억원에서 1054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면밀하고 책임 있는 세입 추계가 이루어져야 함.
8. 도시재생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동공원 조성사업에 도시재생기금

전체 규모와 맞먹는 9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다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 회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본사업계획과 현재 진행과정, 앞으로의 세부계획 까지 다시 한번 제시해주시기 바람.

9. 균형발전본부 소관 위원회의 출석률이 저조함. 개선 조치할 것.
10. 사업 추진 시, 강남 3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삼지 말고, 각각의 지역 특색에 맞는 목표 설정을 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고려할 것.
11. 현대차 GBC 개발 속도가 느려,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 피해가 막심하니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디자인정책관] — 14 권

1. SBA의 DDP 공간 조성 관련,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무리하게 일정 추진하고 예산 편성 후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으로 13억여원의 예산 손실됨.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 내부 공간 접근 및 이용 불편함. 동대문 일대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할 것.
2. DDP 인근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는 동의하지만 SBA의 DDP 분할 위탁 결정 전에 충분한 사전 협의 및 논의가 선행되어야 했음.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및 정책 결정 시 재발 방지를 요청함. 또한, SBA가 DDP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 과거 진행해오던 사업과도 크게 차별점 없어 보여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요망.

3. DDP 내 SBA 관리공간에 미디어 파사드 등이 설치만 했지 안내 인력은 없고 휴식 공간은 조명이 어두워 시민이 불편을 느낌. 비어 있는 공간도 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DDP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디자인정책관, 서울경제진흥원, 경제정책실 사업 내용 중 중복되는 것을 정리해 각 부서 및 기관에서 고유의 역할을 정하고 역할에 집중할 것. 또한, DDP는 그 자체의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시장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분야에 SBA가 DDP에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SBA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이므로 공공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야할 역할을 고민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음.
5. 이슈대응 디자인 개발 사업 자체는 미미한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치구에 배포하고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6.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수변 야간 경관개선 등의 사업들이 예산 집행률은 낮고 사업 추진도 미미한데 점점 바람.
7. 디자인정책관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 사업의 빛공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8.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아울러, 조례상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시민참여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 바람.
9. 동일한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바람. 또한, 행사 대행용역에서 입찰방식을 제한경쟁보다는 일반경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야함.
10. 2023년에 개발된 지하철 노선도가 온라인 플랫폼에 보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할 것.

11. DDP 내 유구전시장 이전 예산을 '24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경써서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12. 서울빛 사업은 서울색을 활용한 조명연출사업으로 명명해 서울색 사업과 함께 운영될 필요가 있음. 서울색을 매년 설정하는 것은 도시 정체성 정립에 혼란을 줄 것이므로,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색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 검토할 것. 또한 서울색 선정 시 시민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할 것.
13. 추경편성을 통해 추진한 지하철유휴공간 혁신프로젝트 '러너스테이션'이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조성 및 운영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초래하게 된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요구함. 추경은 긴급한 사업에 편성해야하므로 숙의과정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할 것.
14.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정책을 책임지는 곳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DDP 고유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잡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것.

[미래청년기획관] — 23 건

1. 천호 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1차 용역 결과가 부적정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2차 용역을 반복해서 수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2.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 청년자율정책 10개를 엠보팅에 투표를 붙였는데 투표기간이 10월 7일까지임. 이 시기는 이미 내년도 본예산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시기라서 예산에 반영하기 적절하지 않고 요식행

위처럼 보임. 시기를 조정하고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3. 주택실의 청년주택 공급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도 미래청년기획관이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택실과 긴밀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바람.
4.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부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인턴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시정하기 바람.
5. 긴급생활안전 이차지원 사업 점검 및 종료사업 절차개선 바람. 미래청년기획관이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들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임.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와 마무리를 잘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해주기 바람.
6. 청년센터 직원과 법인 임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지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필요.
7. 해외청년봉사단 봉사활동 종료 이후 귀국준비금, 커리어적립금 등 과도한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진 것과 관련 시정조치 필요.
8. 청년 관련 조례 중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조례보다 아닌 것이 많은 상황임. 총괄부서라면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함. 미래청년기획관의 청년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 수행하기 바람.
9. 청년기본계획 재수립 시 빠른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가 미흡함. 지난 5년간 청년들의 실태조사 필요. 청년기본조례 이외 8개 조례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태조

사 시기·내용을 통합해 예산을 절감하고 내실있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

10. 청년 기업직무체험 프로젝트, 미래청년일자리,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캠프, 매력일자리(뉴딜일자리) 등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사업이 여러 부서를 통해 시행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이 중복 사용되고 있음. 한 부처에서 정리해서 내실있게 진행하고, 청년과 기업이 동시에 살 수 있는 윈윈구조를 구축하기 바람.
11. 서울시 내 9개 자치구에는 아직 서울청년센터가 설립되지 않음. 청년 센터가 인기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치구의 관심이 저조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특조금 지원 등 각 자치구별로 청년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2. 청년들이 사회와 단절되는 비극적 현실을 예방하기 위해 청년 고립·은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다른 사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청소년정책과의 연계방안 마련 검토 필요
13. 해외청년봉사단 활동 종료 이후 비교적 장기 봉사에 치중되어있는 KOIKA 규정을 준용해 지원된 각종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서 향후 시정 조치 필요.
14. 청년 해외원정대 파견 국가 선정 시 명확한 목적과 선호 분야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 등 검토가 필요하며, 해외관련 용역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 현장실사가 반드시 필요.
15. 청년홍보채널 SNS, 유튜브 등 활용 성과 개선 필요. 유튜브를 청년몽땅정보통에 사업 설명 첫 화면에 실행하게 하는 등 기존 정책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16. 청년수당 콜센터를 한 업체에서 5년간 연속 수행함. 규정에 따르면 제

안서에 업체 식별 정보가 들어가면 안되는데, 서울시 사업실적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17. 영테크 용역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이 기존 업체에 유리한 구조로 다양한 청년 분야 전문가 양성에 불리하다고 봄. 제안서 평가 시 경쟁적 요소 도입 노력 필요. 또한, 영테크 용역비 대비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설계를 잘했다면 사업비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 바람.
18. 청년수당 지급 중단 사유로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 사유 비중이 가장 높는데, 미제출 이유 파악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19. 영테크 사업 신청자 중 군인이 두 번째로 많은데, 향후 군인들이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영테크 참여 인원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급식위원회,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 등 청년이 많은 관심을 갖는 이슈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청년 의무 위촉 제외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외위원회를 재검토할 것.
21.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이 일반 기업이나 다른 기관들의 기술력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들에게 맞는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22. 미래청년기획관의 주요 업무 목표 목적은 '청년들의 성장 도약, 취약한 청년들을 함께 가는 약자와의 동행, 청년들의 정책 참여'임. 업무 목표에 따른 조직 진단과 사업별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함.
23. 청년 공간 대관이 동일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음.

형식적 이용 혹은 특정인이 목적성을 갖고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특정 목적을 가진 유료 프로그램이 공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요망. 무료 공간 이용 시 일부 청년이 혜택을 독점한다는 불공정성이 제기될 수 있음. 아울러, 대관 기록에 대한 관리 및 투명성 강화 필요.

[글로벌도시정책관] — 17 건

1.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공무국외출장은 소속 공무원(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용 절차 중인 사람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것은 잘못임. 유권해석을 '사람'이 아닌 '직위'로 하는 건 조례 위반으로 판단됨.
2. 글로벌센터 상담서비스 축소에 따른 다양한 언어 상담 보완책 마련 및 기존 이중 상담 전문인력 활용하는 방안 강구할 것.
3. 시티넷 등 국제기구 협조 통해 서울시에 국제기구나 국제비영리단체 유치 확대하고, 글로벌센터빌딩 공실 해결을 통해 공간 효율화를 도모하기 바람.
4.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인 '외국인노동자센터'에 이중 언어 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외국인주민 분들이 편리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람.
5. 서울외국인포털과 지역 외국인노동자센터 홈페이지를 사용자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서울글로벌센터 민간위탁 관련, 총예산의 인건비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민간위탁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 필요.

7.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금의 용도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외국 지방정부 재해 구호경비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의 핵심인 공적개발원조(ODA)를 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사항 반영하기 바람.
8. 다양한 외국인주민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외국인주민지원 시설별 프로그램 차별화와 운영 체계화 등 재정비가 필요함.
9. 효과적인 외국인 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서울시 타 부서 및 정부 부처 등과 협업하여, 외국인 주민 관련 각종 데이터 확보와 체계적인 분석·관리 요망.
10. 주민세 등 외국인 소액 체납자 증가 추세인데,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등 각종 외국인주민지원 시설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 강화로 외국인주민의 체납을 방지해야 할 것임.
11. 서울시 ODA 예산 비중은 지방자치단체 최하위 수준이므로 서울시 위상에 걸맞은 ODA 예산 확대와 함께, 서울의 선진 정책 경험을 토대로 다자개발은행(World Bank 등), 국내 ODA 전담기관(KOICA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
12. 중도입국청소년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가 그 역할을 100% 수행하고 있지 못함. 부산시-부산시교육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서울시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밖 청소년으로 남아 있는 중도입국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3. 시장 해외순방지역과 국제협력지역이 다르고 친선·우호협력도시 중 국제개발협력 실적이 있는 곳은 미미하므로 국제교류협력과 국제개발협력을 접목시켜서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14. 지역 외국인노동자센터 중 일부는 종합복지관 내 위치해있고, 종합복지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개편하기에 앞서 시급한 개선을 요함.
15.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설을 운영 중이나 외국인주민 입장에서 혼동 가능성이 있음.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주기별로, 영역별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강구할 것.
16.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있는 국제기구 시티넷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없으므로, 시티넷의 역할을 정립하기 바람.
17. 시티넷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계속 시 지원 예산 늘어나고 있음. 재정독립 방안과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할 것.

[서울디자인재단] — 17 건

1. 서울라이트 DDP 행사기간 동안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행사와 관련한 사전 홍보를 강화해 인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2. DDP 행사 및 투어, 전시 실적은 방문객 수와 만족도 수치로 판단되는데, 정교한 데이터 기반 관리 방안을 고려 바람.
3. 통합홍보비 8억7천6백만원 예산을 책정했으나 콘텐츠 내용 및 개수,

조회수, 시민 참여 등 모든 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고,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함. DDP의 정체성을 살리고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이고 참신한 홍보 마케팅 노력이 필요함.

4. SBA가 DDP 공실 공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재단은 반성하고, DDP 운영에만 매몰되지 않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디자인분야 혁신을 통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사업을 다채롭게 만들어주시길 당부함.
5. DDP와 새활용플라자를 운영하고 빗축제를 대행하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 서울의 모습을 그리는, 서울디자인재단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정립해 나가기 바람.
6. 2024.2.6. 입점업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영업손실 민원에 대해서는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함. 이와 관련된 조치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람.
7. 창업센터 운영 사업은 조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정관에는 빠져 있으므로 정관개정을 통해 조속히 반영하기 바람.
8. 시설관리는 재단의 주요 사업이 아님에도 4개의 시설(33,900평 규모)을 관리하고 있음. 그럼에도 사용되는 시설은 미미하여 실질적 사업이 어려운 상황. 새로운 각오로 서울디자인을 이끌어 가는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 전략을 세워서 보고해주기 바람.
9. 재단에서 취급하는 굿즈가 저가의 소소한 상품에 불과하므로, 성수동 가죽·구두, 종로 금세공품, 전통고예 등과 결합해 고가의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임.
10. 카페 드 페소니아 관련 명도소송 안좋은 사례임. 명도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울러, 카페운영업체인 우일티에스 홈페이지

지에 재단과 DDP CI가 협력업체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시정 바람.

11. 재단 로고 사용이 홈페이지 및 업무보고서 모두 통일되도록 사용 바람.
12. 24년 7월 DDP 설치 조각품 민원 관련하여 파악하여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추후 보고 바람.
13. 서울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 및 정책 관련하여 DDP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화재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 바람.
14. 수의계약 관련 1인 수의계약 또는 억단위의 수의계약 건이 많음. 재단은 반복적 용역 수행과 수의계약 남용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람.
15. 전문직 가급 자리를 비워두지 말고, 빠른 채용을 통해 공석이 없도록 할 것.
16. 새활용플라자 사업 성격이 재단과 맞지 않음.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을 확보할 것. 또한, 새활용플라자 지하 1층 하역장은 한곳에서 독점한다는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는데 관련하여 민원이 없도록 운영 바람.
17. DDP 홈페이지의 관리 상태가 부실함. 업데이트를 철저히 할 것.

나. 건의 및 기타사항 **56건**

[도시공간본부] — 13건

1. 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와 인근지역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고민하거나, 공간 대개조의 개념과 연결해서 새로운 유형의 공간을 만들 수 있

도록 하기 바람.

2. 용적률 거래제가 법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국가 유산이 많아 정비가 어려운 도심권에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3.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하여 충분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균형발전본부와 발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임.
4. 과거 용적거래제도와 유사한 '결합건축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성공사례가 없었으며, 당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함.
4. 공공개발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함. 다만, 해당 토지를 소유한 개인 소유자와도 협의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주시기 바람.
5.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한 철도지하화 사업구간 내에 오류역사~온수역 제외된 것과 관련, 서울시(안)에는 기술적 사유로 제외해놓고 국토부 최종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무책임. 도시 연결성 측면이나 경인선의 상징성 측면, 서울도심 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온수역 포함된 경인선 전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 구간에 포함되어야 함. 경기-인천 등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국토부에 건의 필요.
6.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면적이 제각각인 상황이며, 주택공급 활성화에 있어 사업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유사사업에 비하여 소극적인 면이 있음.
7.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관련 조례 추진 시 기본계획도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축소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기 바람.

8. 대학 혁신성장시설 내 지역기여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기 바람.
9. 종로구 부암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필지에 대해 저해 요건이 없을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검토 바람.
10.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공간 재편에 대한 기준을 먼저 잡고, 민간 등에 공모·자문 하는 방식 검토 필요.
11. 올해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한 구로평상, 신흥시장 클라우드 같은 개성 있는 건축이 정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2. 2021년 4월 창신동 남측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음에도 2022년 7월 취임한 구청장이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종로구와 조율해주기 바람.
13.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건축물이 순수자연취락인지 투기 목적 건축물인지 파악하여 순수자연취락에 대해서는 신축 행위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한옥촌 조성 등)을 제시 바람.

[균형발전본부] — 11 건

1. 신내 차량기지 일대 봉화산 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 중랑구에서 제안을 받아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2. 남산 곤돌라 소송 관련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한 항고 절차 추진 시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명 및 대응이 필요함.

3. 남산 곤돌라 소송 관련, 시민들의 남산 접근성·편리성 강화 등 남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항고 과정에서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 중 각종 재개발 사업에 착수해 도시재생 명목으로 기투입된 예산 2,434억원이 매몰비용으로 전략. 향후 정책 결정 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5. 보존 위주의 1단계 도시재생에서 조성한 거점시설들이 2단계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와 협의해주기 바람.
6. 수색역 DMC역 차량기지 이전 관련하여 고양시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협상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할 것.
7. 남산 곤돌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남산케이블카의 문제점(개인사업자의 독점 및 전횡, 비공익적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음. 식도면허 갱신, 공원점유허가 등 서울시가 제제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8. GBC 관련, 현대차의 세부개발 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재산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각별한 노력 요망.
9. 균형발전본부가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머무르지 말고 도시공간본부와 이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해주기 바람.
10.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 주민, 주민대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임.
11.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이후 시설물의 명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체육시설에 명칭사용권(naming rights)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에도 명칭사용권을 적용하여 유지보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임.

[디자인정책관] — 3 건

1.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운영 능력을 제고하고 독자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DDP 분할 위탁 운영 결정 과정에 소관 상임위 보고가 누락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부분과 DDP 기업 유인 요소가 적어 SBA에 일부 공간 위탁하게 된 것에 대한 반성 필요.
3. DDP가 시민과 기업 모두를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디자인정책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

[미래청년기획관] — 12 건

1. 고립·은둔청년, 특히 은둔청년들을 위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나 형식적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을 도모해주기 바람.
2. 미래청년정책은 불확실하고 창의력이 필요한 사업인 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도 있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래 세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는 신념으로, 청년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3. 청년 관련 타부서 소관 조례들을 분석하여 정책 사각지대, 부족한 부분 등 각별히 신경쓸 것.

4. 청년정책 홍보 유튜브의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방안 고민할 필요가 있음.
5. 청정넷 관련, 다년차 청년 참여자들의 경우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할때 청년들의 참여도 및 이행능력 높이기 위해 청정넷 청년 선발 시 다년차 청년 참여시킨 서류심사가 필요해 보임.
6. 청년몽땅 정보통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7. 종로에는 '서울청년센터'가 없음.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종로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람.
8. 은둔과 고립에서 단기간에 탈출한 청년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울청년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
9. 미래청년기획관의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보면 '경쟁력 강화와 도약 기회 마련, 불안·걱정에서 청년들을 구조'라고 돼있음. 불안·걱정의 근본 원인은 지나친 경쟁인데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불안도 없애준다는 건 모순임. 청년들의 교육비 지원, 일자리 지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주기 바람.
10. 청년 전문가를 양성할 것인지, 청년 창업가를 발굴할 것인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청년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주는 사업을 고민하기 바람.
11. 강남, 용산 종로 등 청년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 및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업 추진이 필요.
12.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관련, 외부 심리상담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어 일부가 개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직접 상담사를 채용하여 공공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도

도모할 것을 제안함.

[글로벌도시정책관] — 9 건

1.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겠으나 외교에 미치는 영향도 있으므로,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데 힘써주기 바람.
2. 글로벌빌리지센터 추가 개소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함.
3. 잦은 소관부서 이관으로 정체성이 불분명해진 서울글로벌센터가 외국인 지원 기관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 재정립이 필요함.
4. 서울시가족센터 사이트(패밀리서울)에서 취업 등 홍보 강화 및 다문화 가족 취업중점기관 운영사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5. 현재 구로구 가족센터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권역별 거점센터 육성을 통해 타 자치구의 수요에도 대응해야 하며, 수요증가에 따른 예산 확대 및 아이돌봄 인력 처우 개선이 필요함.
6.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신설된 조직으로 아직 업무비중에 따른 인원 배치 및 사업계획이 미흡함. 앞으로 업무 우선순위를 고려해 인력 재배치와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바람.
7. ODA사업이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고 실제 사업규모는 미미함. 실질적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홍보에 걸맞는 교류협력 역할 수행으로 서울시 위상을 높이길 바람.

8. 요식업 등 영세 상인의 인력난 해소 위해 비자 완화 등 실질적 인력수급에 적극적 노력 필요함.
9. 외국인유학생의 정착 사업 추진시, 취업 기회 제공에서부터 정착 지원까지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외국인유학생들이 서울글로벌센터까지 '찾아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외국인유학생 정착 지원 센터는 대학교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궁극적인 정책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것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할 것.

[서울디자인재단] — 8 건

1. SBA의 DDP 분할위탁 관리 및 공간활용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디자인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을 요구.
2. 아트홀 1층 카페 명도소송이 장기전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SBA 퓨처리움 공간 입주가 불가한 상황. 전반적인 SBA 사업 성과가 미진할 경우 해당 공간 미활용을 원인으로 분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의 신속한 종결에 힘써주기 바람.
3. 홍보 관련 NFT 구매자 대상으로 문자 발송을 하고 있는데, DDP를 서울 시민에게 알리려면 정보 알림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개선 바람.
4. 디자인재단 경영평가 관련, 5년 연속 기관 평가 결과 저조는 재단 경영층의 리더십 부재, 경영목표 및 현안 해결 노력 부재, 사업 관리와 조직 관리 부실의 결과임. 재단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영진의 자정 노력 시급.
5. 외부강의 신고 조사 관련 지적이 없도록 적법한 행위로 진행해야 함. 지적 대상이 모두 간부급임. 향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람.

6. DDP의 활성화가 인근 동대문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기 바람.
7.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공공기여 기부체납 공간 등을 활용해 확장할 필요가 있음.
8. 안전문제, 인사문제 및 경영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

다. 자료요구 55건

[도시공간본부] — 6건

1. 역세권 활성화사업 46개소 추진현황 자료
2. 역세권 활성화사업 46개소 추진현황 및 신축건축물 비율 자료
3. 철도지하화사업 총사업비 관련 산출근거 및 제안서
4.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비오톱관리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간 현황자료
5. 1종저층주거지 관리체계, 1종 전용 및 1종 일반현황 분석 자료
6. 비온드조닝 실현을 위한 혁신방안 마련 용역의 현재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균형발전본부] — 5 건

1.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스마트시설 도입계획
2.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 집행정지 건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

3.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현황
4. 신성장 거점사업 관련 내년도('25년) 예산편성 내역
5. 舊 서울의료원부지 사업계획 용역 내용

[디자인정책관] — 7 건

1.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 계획 및 24년도 점검내역 일체
2.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개발, 읽기 쉬운 디자인도시 조성, 이슈대응형 디자인 개발,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개발 사업의 입찰 공고문, 업체 제안서, 제안서 평가 결과보고 및 결과물 일체
3. DDP 내 상업적인(이윤 창출 가능한) 공간의 디자인재단과 SBA 비율 산출 자료
4. SBA와 디자인재단 간 시설관리 협약서
5. SBA에서 디자인재단에 납부하는 관리비 납부 자료
6. SBA의 G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 현황 및 성과 자료
7. 시민휴식공간 조성, 도시경관개선,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 좋은간판 공모전 개최,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지하철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 수변 야간경관 개선 사업의 예산과목별 세부 내역, 추진계획, 지연사유

[미래청년기획관] — 11 건

1. 청년참여기구 관련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지원 현황, 분과 선정 기준, 분과별 회의 개최 횟수, 총원 대비 참석자 현황

2. 청년자율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운영 계획('19년~현재), 집행 현황 ('20년~현재)
3. 청년 해외봉사단 사후관리 및 취업 현황, 성과보고 동영상 및 보도자료
4. 미래 청년 일자리 고용 승계 현황
5. 청년 의무 위촉 제외 위원회 목록
6.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환수 현황
7.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받은 사유
8. 학자금대출 이차지원사업 신청자별 지원사유
9. 서울 청년 해외 원정대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현황과 사업 이후 결과 및 비용
10.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추진 현황
11.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상담파트너 위촉 상세 사업계획 및 현황

[글로벌도시정책관] — 6 건

1. 외국인 유학생 유입에서 체류·취업 연계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세부자료
2.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대학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 결과 및 정리내용 공유
3.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각 자치구별 현황자료('23년도~올해)
4. 오세훈 시장 해외순방 일정('23년도~올해)
5. 서울시 ODA 챌린지 집행예산 자료
6. 시티넷에 편성된 예산 최근 5년간의 예산 목, 예산 목별 세부 사용 내역, 추진된 사업 및 그에 따른 성과 일체

[서울디자인재단] — 20 건

1. DDP 전시 관련 SBA와 디자인재단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자료
2. 최근 3년간 세입금 출연금 비교 자료
3.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 및 예비비 금액
4. DDP 카페 드 페소니아 무단점유 조치 현황
5. DDP 디자인스토어 입점업체, 입점물품, 매출액 자료
6. 제로웨이스트 9월 시민행사 자료 일체
7. 최근 3년간 재단 운영 4개 시설 예산 및 인원 현황
8. 디자인재단 시설관리 4개 시설물에 대한 세입·세출 자료 및 각각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인력 현황 자료
9. 서울디자인 2024 수익 내역 자료
10. 재단 전문직 9명의 경력, 전문 분야, 현 업무분장 자료
11. 제로웨이스트 2024 추진계획, 집행사업 내역 일체
12. 최근 4년간 재활용플라자 교육 사업 내용 일체
13. 2023년도 종합성과평가보고서 재활용플라자 분임 경위
14. 경영평가 처리 결과 관련 보수체계 개선 자료
15. 최근 4년간 성과급 지급 내역
16. 재단 협력(후원) 기관 협력 내용(재활용, 서울라이트, 서울디자인 2024)
17. 2024 경영평가 평가보고서 자료(2023년 실적)
18. 서울시와 재단이 맺은 위수탁 협약 목록 및 협약서 사본

19. 서울시 굿즈 제작 수량 및 판매수익(2022년 초기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판매 부처별), 기획·제작·판매 등 사업 개요
20. 최근 5년간 홍보 예산으로 사용한 전 비용의 예산 세부 항목,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서, 운영 계획서, 추진 실적, 결과보고서 일체